JPEE 실천공학교육논문지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평생능력개발

J. Pract. Eng. Educ. 11(1), 117-123, 2019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 유형화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군집분석

Investigating the Classification and Ordering of Global Partnership Countries for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sing Cluster Analysis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Young-Min Lee*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 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유형화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 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점 협력국의 유형을 4가지 유형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고,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재배치하였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를 고려하고, 미지정 협력국을 더 발굴하여, 유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using the cluster analysis. The partner countries were prioritized for finance supports and knowledge sharing. We had also redesigned the TVET assistance process as well as reflected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for TVET. Especially, by redesigning the methodological support process, we also increased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V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research method, potential 24 priority partner countries have been designated b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selection criteri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and banks. Then, we conducted the cluster analysis, using three main variables: economic factor, labor market factor, education factor. In results, we clustered four and three types of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TVET. In future, we suggested the new approach for selecting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terms of employment and labor as well as non-designated partner countries, which will need to cooperate for TVET.

Key Words: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iority Partner Coun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luster Analysis,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dx.doi.org/10.14702/JPEE.2019.1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 March 2019; **Revised** 23 May 2019
Accepted 24 May 2019

***Corresponding Author**
E-mail: ymlee@sm.ac.kr

I. 서 론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을 모범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이러한 발전을 추구한 과정에 관심이 높다. 이는,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원조를 제공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한국이 유일하고, 이러한 전환에 직업능력개발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2]. 또한, 관련 입법과 정책들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하고, 다른 선진 공여국의 직업능력개발제도를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현재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직업능력개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UN도 지속가능개발 목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직업직업능력개발 및 양질의 고용과의 연계성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은 공여국, 수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제이며,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최적화된 주제이다[7].

그런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사례들로는 직업훈련원 등 시설 구축, 강사 교류 및 연수, 전문화된 교재 개발과 편찬, 실무적인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등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공여국의 협력 방식은 기존에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중심에서 장기간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수원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외 원조를 추진하는 기관들간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사업 일원화 및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2,3]. 수원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제도, 정책, 사업들을 자국의 제도와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모델을 구상하기에 앞서, 이러한 모델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수원국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점 협력국 지원정책을 통해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8,9].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조 대상국가 선별(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국가 리스트중에서 먼저 선별), 정량평가를 통해 1차 후보국 선별, 정성평가를 통해 1차 후보국 수정, 최종 선정의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중점 협력국 지정 이후, 수원국의 원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 조사를 통해 개별 국가와의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한다. 예컨대, 중점 협력국인 라오스의 경우, 지역개발, 물 관리, 보건위생, 교육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경우,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과 함께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3,4]. 직업능력개발에서 직업교육에 관련된 자료 축적이 많이 되었고, 고용이나 노동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 이슈를 다룰 수 있으나, 국가간 노동법과 제도 차이가 매우 상이하여 중점협력 분야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야로 분류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방식의 일관성이나 분류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자체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교육분야 내에서도 소요 재정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중점 협력국 선정과 유형화 분류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8,12].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간 경제, 사회발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여 분류의 타당성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은 어느 국가인가? 둘째, 선정된 중점 협력국들의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선정된 중점 협력국들의 지원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II.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선행연구 분석

A.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현황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개발협력 사업 예산은 전체 개발협력 예산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다[7]. Kim 등[4]의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직업능력개발분야 ODA사업 107개를 재분석한 연구 결과[12]를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 개별 사업당 평균 예산은 대략 332만불이고, 사업을 추진한 기관

들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이었다. 수원국은 전체 38개국이며 국가별로 베트남, 스리랑카, 이집트, 캄보디아, 리비아, 멕시코 순으로 지원을 다수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 45개 사업, 아프리카 지역 34개, 중남미 지역 18개, 중동 지역 6개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프로젝트 사업 기간은 약 3년이었으며, 사업의 구조는 무상원조 방식이 64%로서, 유상 원조 방식 사업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았다. 직업능력개발 직종으로는 자동차, 컴퓨터, 기계, 전기, 전자 등 IT와 전기 업종 및 목공, 건축, 산업설비 등 토목설비업종, 이미용,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종 등이 직업훈련 관련 업종들이었다. 사업의 형태는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직업훈련원 건립, 직업능력개발 시설과 장비 제공, 직업능력개발 관련 실무자 및 교사들에 대한 국내 초청 연수과정 운영, 국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파견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진 사업내용이었다.

B.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요 이슈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원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5,6].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및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KOICA)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적극적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고 양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8,12].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의 경우에도, 국제협력 사업 자체를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향상되지 않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관들에서는 다른 여타 정부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을 간주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국제협력의 전문성 확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의 발전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이나 기존 기관들 내에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관리 운영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은 직업훈련원 건립이나 교사 연수 등과 같은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국가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나 컨설팅은 미비한 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사업발굴 및 수요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3,12]. 즉, 역량 있는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실무자 양성, 원조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주,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질 제고, 성과평가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과 시범사업 추진 등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외 관련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은행, 유네스코,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나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공여국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과 공동 사업 추진 및 노하우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12]. 또한, 향후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외 국제협력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국제협력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군집분석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속성들을 탐색하여, 이들간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군집의 기준이 되는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경제발전 수준, 실업률, 교육수준을 통해 순위 점수에 의한 군집 방법을 고려하였는데, 이 방법은 분류의 용이성은 높으나, 자의적인 분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서, 평균 값에 의해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군집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유형화를 위한 주요 변인으로는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구성하였다. 직업능력개발 중점 협력국을 군집화하기 위해 3가지 변인과 세부 변

표 1. 유형화를 위한 평가 지수 도출 방법

Table 1. Calculation method of classification

주요 변인	국가별 수치	Max(a)	Min(b)	Normalizing (c)	Weight (d)	평가 지수
인간개발지수	a1	비교대상 국가 중 최댓값	비교대상 국가 중 최솟값	x1=(a1−b)/(a−b)	33.3%	(1)=x1×d
1인당GNI(PPP)	a2			x2=(a2−b)/(a−b)	33.3%	(2)=x2×d
1인당GDP	a3			x3=(a3−b)/(a−b)	33.3%	(3)=x3×d
경제발전 평가 지수(합계)						(1)+(2)+(3)
실업률	b1	비교대상 국가 중 최댓값	비교대상 국가 중 최솟값	y1=(b1−b)/(a−b)	33.3%	(1)=y1×d
실업자 비중	b2			y2=(b2−b)/(a−b)	33.3%	(2)=y2×d
경제활동인구천명	b3			y3=(b3−b)/(a−b)	33.3%	(3)=y3×d
노동시장 평가 지수(합계)						(1)+(2)+(3)
평균교육기간	c1	비교대상 국가 중 최댓값	비교대상 국가 중 최솟값	z1=(c1−b)/(a−b)	100%	(1)=z1×d
교육수준 평가 지수(합계)						(1)

※ 교육수준은 하나의 변인(평균 교육기간)로 이루어져 가중치를 100% 적용

※ 각 변인의 주요 값은 OECD Stats 2014~2016년 자료를 토대로 값을 산출[13]

인들을 채택한 것은,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개발도상국의 원조와 국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기구들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였고, 아울러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참조하여 선택하였다. 세부변인으로 경제발전 변인에서는 인간개발지수, 1인당 GNI, 1인당 GDP 3개 변인을, 노동시장 변인에서는 실업률, 실업자 비중, 경제활동인구수 변인을, 교육변인에서는 평균 교육기간 변인을 세부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지수는 표 1과 같이 계산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유형화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의 수를 3개와 4개로 설정한 후, 각각의 군집 특성과 직업능력개발 우선순위 집단을 설정하였다. 군집의 수를 축소하거나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는 3~4개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분석하였다[9,10,12]. 먼저, 군집 수를 4개로 할 경우, 군집의 주요 특성의 경우, 유형 1은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평균적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들이었고, 유형 2는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시장의 상황은 평균적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높은 국가들이었다.

유형 3은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괜찮으며, 교육수준은 평균적인 국가들이었으며, 유형 4의 경우, 경제발전이 매우 늦고, 노동시장 상황은 평균적이며,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형 1의 국가들로는 우간다, 탄자니아 등이었고, 유형 2의 국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었으며, 유형 3의 국가들로는 베트남, 필리핀, 볼리비아 등이었고, 유형 4의 국가들로는 모잠비크, 르완다 등이었다. 지원 우선순위는 유형별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지원사업을 실시했을 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데, 한국은 경제발전이 보통이면서, 노동시장 사정이 괜찮고, 교육수준이 일정 정도 수준인 유형의 국가들에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적인 경쟁력을 접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교육이 안정되어야, 직업능력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집 수를 3개로 할 경우, 군집의 주요 특성의 경우, 유형 1은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평균적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들이었고, 유형 2는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이었으며, 노동시장의 상황은 괜찮은 편이었고, 교육수준은 평균적인 국가들이었으며, 유형 3은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시장 상황은 평균적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높은 국가들이었다. 유형 1의 국가들로는 모잠비크, 우간다, 르완다 등이었고, 유형 2의 국가들은 가나, 베트남, 필리핀 등이었으며, 유형 3의 국가들로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었다. 3개 유형의 경우, 유형을 4개로 분류한 군집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이 평균적이고, 노동

표 2. 중점 협력국 유형화 1 (군집 수 4개)

Table 2. Classification of partnership country by four clusters

	군집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경제발전 변인	.21	.48	.40	.11
노동시장 변인	.34	.34	.45	.36
교육 변인	.34	.81	.59	.15
군집 특성	경제↓, 노동시장−, 교육↓	경제↑, 노동시장−, 교육↑	경제−, 노동시장↑, 교육−	경제↓↓, 노동시장−, 교육↓↓
지원 우선순위	3	4	1	2
국가 수	유형 1 (8개국)	유형 2 (5개국)	유형 3 (6개국)	유형 4 (5개국)
1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모잠비크
2	탄자니아	몽골	필리핀	르완다
3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네팔
4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5	방글라데시	페루	파라과이	세네갈
6	가나		콜롬비아	
7	라오스			
8	파키스탄			

↑: 평균보다 상위, −: 평균적인 수준, ↓: 평균보다 하위, ↓↓: 평균보다 매우 낮은

표 3. 중점 협력국 유형화 2 (군집 수 3개)

Table 3. Classification of partnership country by three clusters

	군집		
	유형 1	유형 2	유형 3
경제발전 변인	.16	.38	.48
노동시장 변인	.35	.44	.34
교육수준 변인	.25	.58	.81
군집 특성	경제↓, 노동시장−, 교육↓	경제−, 노동시장↑, 교육−	경제↑, 노동시장−, 교육↑
지원 우선순위	2	1	3
국가 수	유형 1 (12개국)	유형 2 (7개국)	유형 3 (5개국)
1	모잠비크	가나	우즈베키스탄
2	우간다	베트남	몽골
3	르완다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4	네팔	볼리비아	스리랑카
5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페루
6	탄자니아	파라과이	
7	세네갈	콜롬비아	
8	캄보디아		
9	미얀마		
10	방글라데시		
11	라오스		
12	파키스탄		

↑: 평균보다 상위, −: 평균적인 수준, ↓: 평균보다 하위, ↓↓: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태

시장의 괜찮으며, 교육수준이 평균적인 국가 유형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V.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등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원국을 선정하고, 이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4,8,9]. 본 연구에서 군집을 4가지 유형화한 경우와 3가지 유형화를 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경제상황과 교육여건이 안좋거나 노동시장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형이 분류되었다. 즉, 군집의 빈도와 우선순위 분류기준이 상이하였으나, 지원 대상국들의 경우 중첩이 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중점적인 지원 국가로 분류되었고,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교육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고용여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경제상황이나 교육여건이 대체로 좋으나, 노동시장의 신규 노동수요가 높고, 자원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남미국가들의 직업능력개발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인 발전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의 규제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나 교육여건이 지나치게 안좋은 국가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보다는 교육 자체의 중점 협력이나 개발원조를 통해 경제부흥에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점 협력국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하지 않고, 교육 분야로 포괄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노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특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나 협력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기존에 선정한 중점 협력 대상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9,10].

정부의 국제협력 재정지원을 일원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대상국들을 활용하는 것이 협력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협력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즉, 고용노동분야라는 관점이 배제된 현재의 중점 협력국 지정 대상국들과는 별개로 고용노동 국제협력 관점에서도 잠재적인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대상협력국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OECD DAC 회원국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 노동시장, 교육수준 등의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별한 후, 과거 지원 대상국 여부, 지원규모, 고용노동 협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상국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중점 협력국을 선별한 후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11]. 단순 협력 주체나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해당 수원국의 직업능력개발 제도나 정책 실태 등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성과가 충분히 산출될 수 있고, 질 관리 등의 후속 사업 연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점 협력국과 이미 협력관계를 구축한 국제기구나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고, 중점 협력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과 관련된 연구나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개인차원의 경험 축적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언어, 글로벌 마인드, 문제 해결력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 현지에서 양자, 다자 협력기구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국제협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자의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사업 신

규 모델개발 연구보고서(2017)와 한국형 직업능력개발 공유 모델 구축 연구보고서(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1] S. T. Kim, J. W. Yoon, and Y. G. Kim, "Analysi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 country," *Korea Governance Research*, vol. 19, no. 1, pp. 125-153, 2013.

[2] C. H. Kim, "Policy and issu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7.

[3] C. H. Ki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y for vocational training," KOICA Report, 2012.

[4] C. H. Kim, Y. S. Rha, D. G. Kim, J. E. Lee, U. D. Kim *et al.*, "Post eval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3.

[5] S. W. Moon, "KOICA case study: TVET direction for decent jobs," *International Cooperation Journal*, vol. 2, pp. 54-72, 2014.

[6] Y. H. Lee, "TVET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9.

[7] J. S. Jang,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education field and strategy for reac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2015.

[8] Y. M. Lee, Y. S. Choi, and I. S. Ki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at direction and tasks are need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7, pp. 163-170, July 2017.

[9] S. W. Kim and H. J. Namgung, "The political economy of selecting Korean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vol. 19, no. 1, pp. 135-158, 2016.

[10] M. S. Lee, "An analysis of social capital in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of ODA,"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19, no. 2, pp. 1-22, 2015.

[11] J. S. Jang, "Pre-feasibility study of developing countries of employment and labor," HRD Korea Report, 2016.

[12] Y. M. Lee and Y. S. Choi, "An study of designing model for Korean TVET experience," HRD Korea Report, 2017.

[13] OECD, Stats of OECD, https://stats.oecd.org

이 영 민 (Young-Min Lee)_종신회원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이학사)
1999년 3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문학석사)
2004년 12월 : 플로리다주립대 Instructional systems (철학박사)
2007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직업자격, 통일교육